

경제활력대책회의
20-8-1 (공개)



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·경제 종합대책

2020. 2. 28.

관계부처 합동

순서

I. 최근 경제상황 점검	1
II.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및 경기보강의 큰 틀 ...	4
III. 민생·경제 종합대책 추진과제	8
1. 국민안전 - 방역체계 가동 및 마스크 시장안정 ..	9
2. 민생경제 안정	11
① 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	11
②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	15
3. 경제활력 보강	18
① 내수 회복 지원 - 先내수침체 방지 및 後분위기 반전에 총력 ...	18
② 투자 및 수출 활력 제고	21
4. 전방위적 정책역량 집중	25
① 정책공조 및 협력 강화	25
② 재정의 역할 강화	26

I. 최근 경제상황 점검

◇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·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

1 확진자가 급증한 2.19일 기점으로 민생여건이 크게 악화

① (서비스업) 방한관광객 감소,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관광, 문화·여가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위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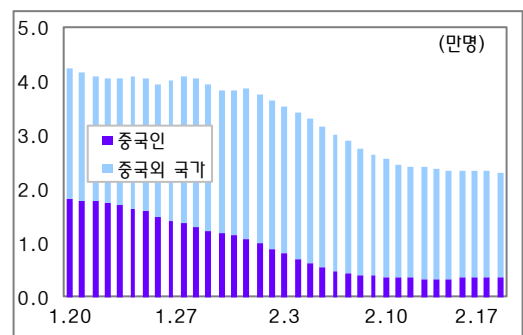
전년동기대비 증감율(%)

	1.2주	1.3주	1.4주	2.1주	2.2주	2.3주
방한관광객	19.0	19.5	△16.1	△31.2	△47.9	△48.1
방한중국인	31.1	24.9	△37.3	△71.2	△81.2	△80.4
면세점매출	2.4	△14.3	△23.4	△42.0	△38.4	△40.4
영화관람객	△24.8	△40.1	△45.3	△56.8	△38.0	△57.0
놀이공원	0.9	△6.1	△55.1	△73.6	△63.5	△71.3
항공기탑승객	22.2	7.9	△35.2	△69.2	△83.5	△84.4

* 출처: 법무부, 여신금융협회 등

※ <주> 일일 지표 비교시 요일 차이에 따른 왜곡 방지를 위해 전년동요일 비교를 원칙으로 하되, 규정 연휴 요인('19년: 2.1주 / '20년: 1.4주)을 감안하여 조정

방한관광객수 추이



* 출처: 법무부

② (소비)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점·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 지속, 다만 온라인·편의점 매출 증가 등이 일부 완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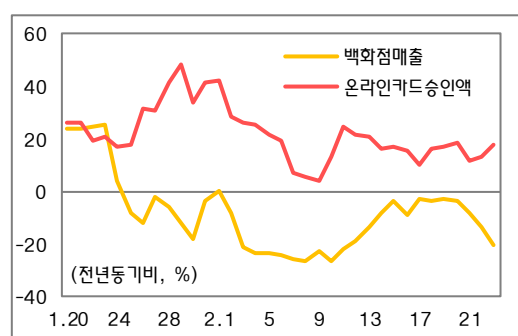
전년동기대비 증감율(%)

	1.2주	1.3주	1.4주	2.1주	2.2주	2.3주
백화점매출	22.5	△12.2	△8.3	△22.6	△1.9	△20.6
대형마트매출	12.2	△17.1	△6.3	△8.3	△6.4	5.0
숙박	2.7	0.0	△0.9	△17.7	△10.8	△24.5
음식점	4.5	△0.5	△2.7	△9.6	△2.0	△14.2
온라인쇼핑	15.0	31.4	28.6	4.2	15.0	14.7
편의점	7.4	5.7	3.2	2.5	10.6	2.7

* 출처: 소상공인공단, 여신금융협회, 주요 백화점·마트 등

※ <주> 일일 지표 비교시 요일 차이에 따른 왜곡 방지를 위해 전년동요일 비교를 원칙으로 하되, 규정 연휴 요인('19년: 2.1주 / '20년: 1.4주)을 감안하여 조정

백화점 및 온라인 매출 추이



* 출처: 여신금융협회, 주요 백화점

③ (심리) 소비자심리 및 기업심리도 2월 들어 크게 위축

* CSI : ('20.1) 104.2 (2) 96.9

** 제조업BSI : ('20.1) 76 (2) 65

↳ '15.6월<△7.3p> 메르스 이후 최대폭

↳ '12.7월<△11p> 유럽 재정위기 이후 최대폭

②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주요한 경기 하방리스크로 부각

- ① 작년 4/4분기 이후 실물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**경기회복**에 대한 **기대감** 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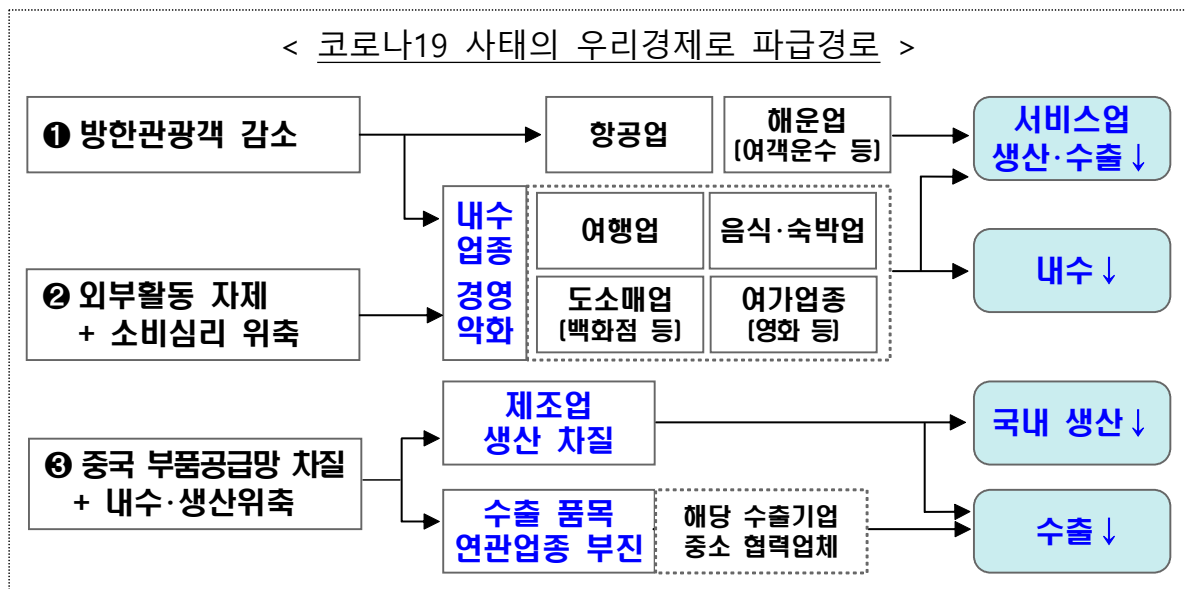
* GDP 성장률(전년동기비, %) : ('19.1/4) 1.7 (2/4) 2.0 (3/4) 2.0 (4/4) **2.2**
 * 소매판매(전년동기비, %) : ('19.1/4) 1.6 (2/4) 2.0 (3/4) 2.2 (4/4) **3.4**
 * 설비투자(전년동기비, %) : ('19.1/4)△18.7 (2/4)△6.7 (3/4)△1.9 (4/4) **3.8**

- ② 그러나,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**對中 수출**이 **크게 감소**하고, 중국으로부터의 **부품수급 차질** 등으로 **일부 공장의 가동 중단** 발생

* 對中 일평균수출(전년동기비, %) : ('19년)△11.2 ('20.1월)△0.3 (2.1~20일)△22.3

- ③ 최근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, 과거에 비해 **중국경제의 비중 확대** 및 우리경제에 **영향력 확대** 등 감안시 파급영향 확대 가능성

* 중국GDP/세계GDP(%) : ('03) 4.3 → ('19) **16.3**
 * 방한관광객중 중국인 비중(%) : ('03) 10.8 → ('19) **34.5**
 * 對중국 수출규모(억불) : ('03) 351<전체 수출의 18.1%> → ('19) **1,362<25.1%>**



◇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**민생 및 경기측면의 어려움**이 1/4분기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**확대**

➡ 방역 및 피해극복 지원 등 **민생경제 안정**과 함께 **경제활력 모멘텀**을 지켜내기 위한 **특단의 정책대응** 긴급

[참고]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국경제 및 글로벌 경제 영향

◇ 코로나19가 중국내 빠르게 전파되는 가운데, 전세계로 확산중
→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하방압력으로 작용

① [중국경제] 내수위축, 생산차질 등에 따른 성장 둔화 불가피

※ '03년 사스 발생 당시 성장률(전년동기비, %) : ('03.1/4)11.1 (2/4)9.1 (3/4)10.0 (4/4)10.0

① (내수위축) 도시간 이동제한, 해외여행 금지, 경제심리 위축 등
→ 서비스업(음식·숙박·여행·도소매업 등) 및 소비 위축

* 중국 정부는 해외 단체여행 금지(1.25) 및 개별여행 자제령(1.28) 등 시행

② (생산·수출 감소) 공장 가동 중지 및 가동률 저하 등
→ 생산차질 및 수출 둔화

* 춘절연휴 연장(1.24~30 → 2.9일) 등에 따른 공장가동 중지

* 2.10일부터 공장가동 재개, but 근로자 출근율 60% 수준 → 가동률 저하

➔ 1/4분기를 중심으로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
“부정적 시각”이 점차 강화

* IB들은 중국 1/4분기 GDP 영향을 당초 $\Delta 1\%p$ 내외 → 최근 $\Delta 2 \sim \Delta 3\%p$ 수준까지 추정
<바클레이즈(5.8→4.0%), 노무라(5.8→3.0%), 골드만삭스(5.6→2.5%)>

② [세계경제] 사태 지속기간 등이 관건, 최근 사태 장기화 전망 증가

① 중국인 관광객 비중 및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
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 예상

* 중국인 관광객은 전세계 해외 여행객의 약 9%, 관광 지출액의 약 18% 차지

▪ 특히, 글로벌 벨류체인상 중국경제 비중 확대 → 세계경제 영향 확대

* 세계경제/교역에서 중국경제 비중(% , IMF) : ('03)4.3/5.6 → ('19)16.3/11.8

② IMF 등 주요기관들은 아직까지는 2/4분기내에 중국경제의
정상화를 전제로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전망을 하향조정

* IMF 성장전망(% , 2.27) : (세계경제) 3.3→3.2< $\Delta 0.1\%p$ > (중국) 6.0→5.6< $\Delta 0.4\%p$ >

▪ 다만, 최근 IMF는 사태가 장기화되는 'L자형 시나리오'를
검토중이며, IB들도 부정적 시각이 점차 강화

※ IMF 및 월가 투자자들도 코로나19를 가장 심각한 Risk요인/Uncertainty로 인식

Ⅱ.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및 경기보강의 큰 틀

◇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**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보강**에 전력투구

대책 및 규모		주요 내용
이번 대책	1차 既 조치 : 약 4조원 * 재정 0.3, 금융 4.0	√ 방역 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(1,092억원) √ 지자체 예비비 등(1,622억원), 공항사용료 감면(300억원) 등 √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(2조원), LCC 대상 운영자금 융자(0.3조원), 매출채권 인수 확대(0.2조원) 등
	2차 행정부 : 약 7조원 * 재정 2.8, 세제 1.7, 금융 2.5	√ 5대 소비쿠폰,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(2.8조원) √ 임대료 인하액 50% 세액공제,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(세수감 1.7조원) √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, P-CBO 발행 등(2.5조원)
	2차 공공·금융기관 등 : 약 9조원 * 한은 5.0, 공공기관 0.5, 금융 3.7	√ 금융중개지원대출(5조원, 한은) √ 공공기관 투자 확대(0.5조원), √ 지신보 재원확충 통한 보증 확대(0.5조원) √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(3.2조원)
3차	추경 : α조원	√ 지역사회 전파 등에 대응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

20+α 조원

- ① (1차) 선제방역·특별방역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업종·분야별 긴급지원대책 마련·추진
- ② (2차)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 및 유관기관 자체적으로 신속 가동할 수 있는 대책 추가 마련
- ③ (3차) 최근 지역사회 전파(확진자 급증)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(안) 편성 추진
- ④ (추가대책) 사태 전개양상 및 경기흐름을 예의주시하며 4~5차 추가대책 지속 강구

[참고] 그간의 1차 정책대응

- ◇ 재정측면에서 **선제방역·특별방역**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
- 피해업종,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의 **피해극복 지원**을 위해 선제적으로 **업종별·분야별 긴급지원대책**을 마련하고 신속 추진

1 선제방역을 재정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

- 1 방역대응체계 구축, 검역 등에 기정예산 208억원 신속 집행중
*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, 검역·진단비 52억원, 격리치료비 29억원 등
- 2 방역 대응 등을 위한 예비비 1,092억원 편성(218, 1,041억원/ 225, 51억원)
* 검역진단 역량 강화 203억원, 격리자 치료 지원 313억원, 방역 및 홍보강화 237억원 등
※ 입원·격리 치료자에 대한 **생활지원비** 등 지원을 위한 **고시 개정**(2.8)
- 3 대구·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(2.21)하여 집중 관리
- 4 역대 최초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가동하여 대응력 강화(※ 위기단계 ‘심각’으로 격상(2.23))

2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

- 1 1.28일부터 「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*」를 주2회 개최(총 7회)하여 실물·금융시장 영향을 종합 점검하고,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가동
* 실무협의체로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(기재부 1차관) 운영
- 2 마스크, 손세정제 등 보건용품에 대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
*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운영(6개 권역 30개 팀, 180명, 2.7~), 매점매석행위금지 고시 제정·시행(2.5~4.30),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(2.12~4.30), 긴급수급안정조치 추가 시행(2.25 국무회의 의결)

3 피해업종·기업의 당면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추진

- 1 자영업자·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·통관(2.5), 금융지원(2.7)
- 2 자동차(2.7), 항공·해운(2.17), 관광·외식(2.17), 수출(2.20) 등 업종별 대책 시리즈로 마련

최근 위기경보단계가 ‘심각’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금번 사태로 인한 민생 및 경제여건 전반에 **어려움이 가중**되는 모습

중소기업 · 소상공인

※ 2.5, 2.7, 2.12 발표

재정지원	세정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피해 중소기업 긴급 운영 자금 국비 지원 ✓ 中 진출 중소기업에 구호물자 지원 ✓ 소상공인·전통시장 마스크·손소독제 배부 ✓ 확진자 경우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 지원 ✓ 가치샵시다 플랫폼 판매수수료 할인(5→2.5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내국세 신고·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✓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✓ 내국세 징수 및 체납처분 최장 1년 유예 ✓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✓ 내국세 및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✓ 항공운송 부품에 대한 관세 산정시 해상비용 적용
금융지원	행정지원 및 기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 ✓ 정책금융기관 기존 보증 1년간 만기연장 ✓ 2조원 규모 정책금융(대출·보증) 신규지원 * 산은 3,000억원 기은 1,000, 수은 10,000, 중진공 250, 소진공 200, 신보 3,000, 기보 1,050, 자신보 1,000 ✓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상 미소금융 확대(500~550억) ✓ 저금리 대출, 특례보증 지원 ✓ 금융시장 교란행위 점검·단속 강화 ✓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및 보험료 인하(2.0 → 2.2조원, 피해업종 대상 10% 인하) ✓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한시 인하(3.4→2.9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(24시간통관체제 가동) ✓ 수입심사시 서류제출·검사선별 최소화 ✓ 원부자재 공동수입 및 대체조달처 발굴 지원 ✓ 수급 애로품목 대체조달처 발굴 및 관련기업 정보제공 ✓ 중국 진출 중소기업 마스크 등 구호물자 전달 ✓ 정부조달 물품 계약·납품기간 연장 ✓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강화 ✓ 민간쇼핑몰 내 특별기획전(10회) 마련

수출기업

※ 2.20 발표

재정지원	세정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수출바우처(최대 8천만원) 지원 ✓ 온라인 전시관 입점 지원(2억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관세 납기연장·분할납부 ✓ 신청 당일 관세환급 ✓ 관세조사 유예
금융지원	행정지원 및 기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수출기업 부도등록 1개월 유예 ✓ 매입외환 입금지연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✓ 수입신용장 만기 최장 1년 연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애로해소센터 운영 ✓ 中 개최예정 전시회를 유사전시회로 대체 지원

자동차 부품

※ 2.7 발표

재정지원	통관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자동차 업계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✓ 수입 부품 국내대체를 위한 단기 R&D 지원 ✓ 스마트공장·제조기술 고부가가치화 R&D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방역물품 수출시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✓ 제3국 공장에서 조달된 대체품 신속통관 지원
금융지원	행정지원 및 기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시설투자 자금 신속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中 지방정부와 현지공장 조기가동 협의 ✓ 中 방역기준 충족 위한 방역물품 지원 ✓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✓ 연구기관, 지역TP 인력 파견 지원

관광 · 외식업

※ 2.17 발표

재정지원	세정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 관광특구 문화재 등 시설 현대화 조기 추진 √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√ 주요 관광안내센터에 손소독제·마스크 공급 √ 확진자 방문 업체에 소독 서비스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√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
금융지원	행정지원 및 기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 500억원 규모 무담보 우대 금융 한시 도입 √ 일반용자 대상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√ 외식업체 대상 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인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 취소·환불 관련 분쟁해결 지원 √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(5→2~3월) √ 외식업 맞춤형 대응요령 포스터 배포

항공 · 해운업

※ 2.17 발표

재정지원	사용료·과징금 등 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 조명료 등 공항사용료 감면 √ 항공수요 미회복시 착륙료 10% 감면 √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√ 여객 터미널 임대료 감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 공항시설사용료 납부 유예 √ 항공사 신규 과징금 1년간 납부 유예 √ 항공기 인증 수수료 감면 연장
금융지원	행정지원 및 기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 저비용항공사 대상 긴급용자(최대 3천억원) √ 항공기 리스보증금 대체하는 보증 지원 √ 여객운송 중단 선사 및 하역사 대상 600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 대출 √ 물동량 감소 입증시 S&LB 통한 유동성 공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 미사용 운수권·슬롯 회수 유예 √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증대(65→70회) √ 중장거리 운수권 배분, 미취항 노선 개설 지원 √ 선박검사 유효기간 3개월까지 연장

지 역 경 제

※ 2.19 발표

재정지원	세정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 마스크·손소독제 등 구입, 방역비용 등 예비비 367억원 집행 √ 지방재정 상반기 60% 집행 √ 필요시 지자체 추경 편성 추진 √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검토, 할인율 10% 상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 지방세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체납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√ 지방 세무조사 유예 및 진행중인 조사는 연기·중지
금융지원	행정지원 및 기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 지역 중소기업 대상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4.2조원 특례보증 2.3조원 지원 √ 새마을금고 신규대출 금리우대(최대 0.3%p),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 마스크 등 구매시 입찰 소요기간 단축 √ 방역용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의약외품 불공정행위 현장점검단 운영 √ 지자체 주관행사 계획대로 추진집행

Ⅲ. 민생·경제 종합대책 추진과제

「국민안전」 + 「민생안정」 + 「활력보강」

① 국민안전을 위한 방역체계 총력 가동 및 시장 안정에 최우선

방역체계 총력 지원

- ✓ 방역대응 체계 및 검역·진단 역량 강화
- ✓ 격리자 치료지원/발열·호흡기환자 별도관리 지원
- ✓ 생활비·유급휴가비 지원
- ✓ 피해 의료기관 손실 보전

보건용품 시장 안정

- ✓ 마스크 생산량 90% 국내공급
- ✓ 공적채널 통해 마스크 日 500만장 이상 공급
- ✓ 대구·청도지역 마스크 700만장 무상 공급
(의료기관·입원환자 200만장 + 취약계층 500만장)
- ✓ 근로자 방역마스크 150만개 추가 공급

② 민생안정 지원에 총력

피해부문 극복지원

- ✓ 임대료 인하 지원 3중세트
- ✓ 소상공인·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
- ✓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
- ✓ 현장 요구가 큰 업종별 핵심애로 해소

지역경제 어려움 완화

- ✓ 지역사랑상품권·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
- ✓ 지역고용 특별지원 신설·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
- ✓ 고용관련 지원금 확대 등 고용안정 강화
- ✓ 가족돌봄 지원 강화 등 민생안정 노력 강화

③ 경제활력 모멘텀 사수

내수회복 지원

- ✓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소비유인 제고
- ✓ 5대 소비쿠폰 등 소비활력 제고
- ✓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소비심리 회복 지원
- ✓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

투자·수출 활력 제고

- ✓ 100조 투자목표 + 건설투자 신속 집행
- ✓ 정책금융 지원 및 규제혁파 가속화
- ✓ 무역금융 확대 및 시장 다변화 지원
- ✓ 국내기업의 유턴 본격화 지원 확대

정책공조 및 협력 강화

〈한은·공공·금융기관 등 전방위적 협업〉

국민안전·민생안정·활력보강 위해 가용한 모든 재정수단 강구

예비비·기금변경

- ✓ 예비비 최대한 신속 지원
- ✓ 기금운용계획 변경

추경

- ✓ 추경 편성 추진
- ✓ 통과 2개월내 75% 집행

☞ 사태 전개양상, 경기흐름 등 보아가며 4~5차 추가대책 지속 마련

〈 민생·경제 종합대책 기본방향 〉

◇ 행정부/유관기관 스스로 즉시 시행 가능한 대안 중심으로 ①철저한 방역 지원, ②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, ③소비·투자 진작에 방점

① 현장 요구가 크고 정책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선정
→ 전달체계 활용, 행정비용 최소화도 감안하며 선별

* (예)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, 지역사랑상품권 규모 확대, 초저금리 대출(기금) 확대 등

② 방역과 피해극복이 최우선이나 위축되는 경기 보강을 위한 선제적 소비 및 투자 진작책도 최대한 강구

* (예) 5대 소비쿠폰 제공, 승용차 개소세 인하,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등

③ 과감한 세제 지원(간이과세자 지원, 소득공제 2배 등)을 추진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, 다만 최소한의 재정원칙은 고려

1. 국민안전-방역체계 가동 및 마스크 시장안정

①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체계 가동 지원

❶ 방역대응, 건강취약계층 복지시설 마스크 보급, 우한교민 임시 생활시설 운영 등에 **예비비 1,092억원*** 신속 집행

* 2.18일 국무회의 1,041억원 / 2.25일 국무회의 51억원

〈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 〉

☑ **방역대응 체계 확충 (41억원)**

▶ 1339 콜센터 인력 169명 확충

▶ 즉각 대응팀 30팀 운영

☑ **검역·진단 역량 강화 (203억원)**

▶ 검역소 임시 인력 20명 확충

▶ 민간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 확대

▶ 음압캐리어 40대 확충

☑ **격리자 치료 지원 (313억원)**

▶ 선별진료소의 장비비·운영비 확대

▶ 입원 치료 병상 설치·장비 확충

☑ **방역 및 홍보 강화 (237억원)**

▶ 보호의·호흡 보호구·감염병 예방 물품키트 등 방역물품 공급

☑ **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(153억원)**

▶ 격리된 입원·격리 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(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)

②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,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해 예비비 0.8~0.9조원 추가 지원

③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발열·호흡기 환자 관리를 위한 별도 진료구역 300개 구축비용* 지원(21억원)

* 임시로 설치 가능한 칸막이를 통해 발열·호흡기 관련 환자와 일반환자를 구분

② 마스크 등 보건용품 시장안정에 가용한 정책역량 총동원

① 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(50% 공적 의무공급, 수출제한)를 추가 시행(2.25 국무회의 의결)하여 국내생산량의 90% 국내공급 추진중

-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의 경우, 1인당 구입가능 수량을 5매로 제한하고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판매 권고

② 소량의 마스크라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, 농협, 우체국, 공용 홈쇼핑망 등을 통해 일일 마스크 500만장 공급

* 약국(24,000개소), 농협(서울경기제외, 1,900개소), 우체국(읍면, 1,400개소), 공영홈쇼핑 등

- 특히,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·경북지역의 경우 마스크 총 1,000만장* 우선 공급

* 2.26~3.1일간 공급물량 500만장 + 기존 공급물량 500만장

< 2.26~3.1일간 공적확보 마스크 배분계획(일일) >

(단위: 만장)

대구·경북	의료진	약국	우체국·농협 등	합계
100	50	240	110	500

③ 대구·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으로 우선 공급(81억원)

- 전체 의료기관 및 입원환자 대상 총 200만장(30일간 지급), 노인·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총 500만장 긴급공급(7일간 지급)

④ 근로자 방역 마스크 150만개 추가 공급(26억원)

* 외국인 다수 고용 50인 미만 사업장, 택시·버스 등 고객대면 운수업 종사자,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등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

2. 민생경제 안정

1 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

① 「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중세트」를 통해 상생분위기 확산 ↳ (민간, 정부, 공공기관)

① 민간 '착한 임대인'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,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

- * 임차인 요건 : ①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, ②도박·사행행위업, 유흥·향락업 등 제외
-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(1~6월) 인하액의 50%를 임대인 소득·법인세에서 세액공제('20년 한시)
-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 정비,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지원(20개 시장)

② 중앙정부·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

- ▶ 지원대상 :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
- ▶ 지원규모 : ① 중앙정부 : 임대요율을 **재산가액의 3→1%** 인하(2천만원 한)
 - ② 국가 위탁개발 재산 : **임대료 50%** 감면(2천만원 한)
 - ③ 지자체 : 임대요율을 **재산가액의 5→최저1% 인하**

③ 공공기관(103개* 기관 참여) 소유재산의 소상공인(중소기업 포함)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하게 인하

- * 철도역 구내매장(코레일),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(LH), 공항내 편의매점(인천공항, 한국공항), 고속도로 휴게소(도공) 항만(부산항만공사/여수광양항만공사)등 임대시설

- ▶ 지원대상 :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
- ▶ 지원규모 : ①6개월간 임대료 **20~35% 인하**(임차인과 협의)
②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

④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 유도

- 소상공인의 광고·판촉비 인하*,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 경감시,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

- * 통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 부담하는 광고·판촉비에 대한 가맹점 부담비율을 10%p 인하하는 경우(상세기준 추후 확정)

< 정책자금 지원가능 프로그램 예시 >

	프로그램	우대사항
산은·신보	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등	금리(최대 1%p 인하), 보증료(0.2%p 차감)
수은	수출 및 해외사업 관련 대출	금리(0.2%p 인하),
중진공	중소기업 정책자금	금리(0.3%p 인하)
소진공	소상공인 정책자금	금리(0.6%p 인하)

- 광고·판촉비 부담 인하 대신 다른 명목의 가맹점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병행(공정거래조정원)

② 소상공인·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등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

①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 대폭 확대

-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(기은, 1.2→3.2조원, +2.0조원)하고, 보증료도 1년간 감면(신·기보 등, 약0.8→0.5%)
-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.4조원으로 대폭 확대(0.02→1.4조원, +1.4조원 기금변경+추경)하고, 대출금리도 인하(23→15%, △0.8%p)
-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기존 계획대비 10배 이상 확대하여 총 1.0조원 공급(0.1→1.0조원)하고, 보증요율도 20% 인하(1.0→0.8%)

②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강화

-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P-CBO 발행규모 확대(1.7→2.2조원, 신보 +0.5조원)
- 만기가 도래한 P-CBO의 재발행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상환부담(최대 2,400억원)을 축소하고, 유동성 확보를 지원
 - * 신보 P-CBO 기초자산(회사채) 만기도래시 재발행 조건 : (현행) 기초자산의 20% 이상 상환 → (개선) 10% 이상 상환
-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배 수준 확대하고(0.03→0.63조원, +0.6조원 기금변경+추경), 대출금리 인하(265→215%, △0.5%p)
- 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확대(20→22조원, +0.2조원)하고, 가입보험료 10% 인하 및 사고시 10일내 지급(통상 15일)

③ 피해 업종별·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 추가 확대

업종·부문	지원 내용
관광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관광업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신설(지신보/NH) ▶ <u>일반융자</u>(1.5~2.25%) 800억원 추가 지원(445개 업체 추가)
식품업 외식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<u>국산 식품가공원료·식자재 구매</u>를 위한 <u>융자 200억원 확대</u> ▶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(現 100억원) 확대 및 지원금리 0.5%p 인하
항공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저비용항공사 대상 긴급융자지원(산은, 최대 3,000억원) ▶ 항공사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보증 프로그램 도입
해운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여객운송 중단 선사 및 하역사 대상 600억원 긴급경영자금 대출(해진공) ▶ 물동량 감소 입증시 S&LB 통한 유동성 공급
자동차부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투자 자금 지원(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, 시설투자 온렌딩 등 활용)

③ 피해기업 등에 대한 **세정상 혜택을 넘어 세부담 자체 완화**

① 기업 애로가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**세부담 완화**

-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*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'21년말까지 **간이과세자 수준****으로 경감

*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(제조업, 도매업 등)도 포함(단, 부동산임대업,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)

** 간이과세 방식 : [매출액 × 업종별 부가율(5~30%) × 10%]

※ 효과 : 90만명,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~80만원 내외, 2년간 △8,000억원

-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관세 **운임특례** 적용(항공운임→해상운임 적용)

※ 실질적 지원을 위해 2.5일(코로나19 관련 세정·통관 지원방안 발표일)부터 **소급 적용**

* (현행) ①수입자의 귀책 없이 ②운송방법을 변경(해상→항공)하고 ③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관세 산출시 항공운임이 아닌 **해상운임 적용**

(추가) 천재지변, 중대한 사업 위기 등의 사유로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 **한시적으로 해상운임 적용**

-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**재산세·종합부동산세**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

*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규모, 경영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

② 소상공인·중소기업 등 부담완화를 위한 **세정·통관 지원** 적극 시행중

- 관광·음식·숙박 자영업자 등에 대해 **납부연장 및 징수유예** 시행

분 류	지 원 내 용
내국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법인세, 부가세 등의 신고·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▶ 既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▶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
지방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취득세,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·납부기한 최장 1년 연장 ▶ 징수·체납처분의 집행 최대 1년까지 유예 ▶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유예
관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·분할납부를 최대 1년내 무담보 지원 ▶ 피해기업 경우 P/L(Paperless)로 전환하여 신청 당일 관세환급 결정·지급 ▶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시점까지 유예

- 코로나19 사태로 원부자재 수급·수출 차질 등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**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**하여 반입·반출 신속 처리
- 수입심사시 서류제출·검사선별 최소화, 감면 건은 신고전에 심사를 완료하여 **수입신고시 즉시처리**

④ 현장 요구가 큰 업종별 핵심어로 해소를 통해 피해회복 지원

① (의료업)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지원을 위해 **건강보험 요양급여비** 조기지급 및 선지급 추진

- 요양급여비 청구시 **10일 이내**에 **청구액의 90%** 조기 지급
(코로나19 종식시까지 한시시행, 2.19 중수본 既 발표)

* (현행) 최대 22일 이내 급여비 지급 → (개선) 10일 이내 청구액의 90% 지급후 사후 정산

- **대구市 의료기관** 대상 **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실시**

* '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선지급 특례 시행('15.7~8월, 2개월분 선지급)

* **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운영방안(안)**

- ▶ 지원규모 : '19.3~4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간 평균금액
- ▶ 지원대상 : 대구시 소재 의료기관 중 신청기관
- ▶ 지원시기 : **(3월분) 3월초 지급 (4월분) 4월초 지급**
- ▶ 정산방법 :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운영 정상화 등 감안해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 상계

② (항공업) 각종 **사용료 납부유예** 등을 통해 항공사 부담 완화

① **운수권·슬롯** :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 또는 감축한 노선의 경우 **운수권·슬롯 미사용분 회수 유예조치**

② **사용료·과징금** : 전년동기비 여객감소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 **공항시설 사용료를 납부유예**하고, **신규 과징금** 발생시 1년간 납부유예

③ **공항사용료·수수료** : 상반기중 항공수요 미회복시 6월부터 **착륙료 10% 감면**

③ (해운업) 선사 부담완화를 위해 한-중 국제여객 선사 **항만 시설사용료** 최대 추가 70% 감면

* (현행) 30% 감면(年 약 30억원) → (개선) 최대 100% 감면(年 최대 약85억원 추가 감면)

④ (자동차부품) 재고 확충이 긴급한 기업에 자동차 기업 퇴직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'**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**' 지원

*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훈련(1인당 2백만원), 채용시 인건비 보조(인당 年22.5백만원)

⑤ (화훼업) 졸업식 취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**화훼업계** 수요 창출을 위해 **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** 등 지원

5 포용적 甲乙관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

1 어려움 분담 활성화를 위한 대·중소기업 협력 인센티브 강화

*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<금년 평가부터 즉시 반영>

- 천재지변, 전염병 등 긴급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 등 **상생협력 활동**에 대해 평가시 가점 부여
- 대기업이 협력사의 **국내유통을 지원**하는 경우,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사례로 인정

2 영세 하청업체의 납품대금 보장 강화

- 하도급 대금조정협의제도상 중기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**원사업자 범위**를 확대*하고, **경과기간**** 규정 삭제

* (현행) 연 매출액 3,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→ (개선) 전체 중견기업

** (현행) 계약 체결 이후 60일이 경과한 후에만 신청 가능

- 대금조정협의제도 운영기업에 대해 「상생협력법」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 경감 등 **인센티브** 강화

2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

1 비상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 특화된 수요창출 노력 강화

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6조원까지 확대(3→6조원, +3조원, 추경으로 추진), 할인율을 5→10%로 한시 상향(3월부터 적용, 4개월간)

* 지자체 발행한도 상향 : (광역) 3,000→6,000억원 (기초) 300→600억원

2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를 상향(月 70→100만원)하고, 발행규모 확대(2.5→3.0조원, +0.5조원)

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개 정부·공공기관 - 1개 전통시장간 1:1 자매결연 협약서(MOU) 체결하고, 공공기관의 지역특산품 구매 확대

② 지역·업종단위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**피해지역·업종 지원 강화**

- ① **대구, 경북(청도)**을 '감염병 특별관리지역'으로 지정(2.21일)하여 특별방역 집중 지원 실시
 - 대구·경북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
- ②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운송업, 공연시설업에 대해 '특별 고용지원업종' 추가 지정(고용정책심의회 의결사항)
 - *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(휴업수당의 2/3지원→3/4지원 등)
- ③ 「**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**」을 신규 도입하여 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 지원
 - * (지자체)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일자리사업 설계 (중앙정부) 수요파악,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
- ④ 고용·산업위기지역,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조기 개최 등을 통해 연장여부 신속 결정
 - * 고용위기지역 : 군산·울산 동구·통영·거제·경남 고성·창원 진해구(4.4일 종료), 목포·영암(5.3일 산업위기지역 : 군산(4.4일 종료)
 - * 특별고용지원업종 : 조선업(6.30일 종료)

③ 고용충격 방지를 위한 **기업의 고용여력 확충**

- ① 피해업체 애로 호소에 대응하여 **고용유지지원금***을 지원하고, 3.1일부터 **정부 지원을 확대****(2.1→7.0만명)하여 사업주 부담 경감

* 코로나 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감소 등 요건 증명이 없어도 고용센터장의 판단하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신고중 ('20.2.27(목) 기준 코로나19 피해업종 신고인원 2.4만명)

** (대기업) 휴업(휴직)수당의 1/2~2/3→2/3, (우선지원대상기업) 2/3→3/4
- ② 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고, 청년들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**청년 추가고용장려금**을 확대 지원

④ 지역사회 **민생안정** 노력 강화

①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**가족돌봄휴가***를 사용할 경우 **가족돌봄비용** 한시 지원**(부부합산 최대 50만원, 213억원)

*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年 최대 10일 범위내에서 가족돌봄휴가(무급) 신청 가능

** ①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, ②어일 5만원(부부합산 최대 50만원)을, ③최대 5일간, ④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

- **가족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해 사업주에 협조 안내문 발송, 근로자에 대한 SMS 안내 및 온·오프라인 홍보 강화**

* (온라인) 포털 배너, 카드뉴스, (오프라인) 리플릿, 전광판

- **정기 근로감독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 집중 점검**

* 건강보험공단의 임신·출산 정보를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

②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용자를 통해 **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**

- **용자 지원요건*을 완화**(중위소득 2/3 이하 → 중위소득 이하)하고, 저소득근로자 **지원대상 0.4만명 확대**(1.3→1.7만명, 169억원)

*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노동자에 대해 총 2천만원 한도에서 의료비, 자녀학자금 등을 1.5% 저금리로 용자지원

↳ (현행) 중위소득('20년 387만원) 2/3 이하 → (개선) 중위소득 이하

- **휴업에 따른 임금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***에 대해 **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**(0.1만명, 49억원)

* 학습지교사, 보험설계사, 골프장 캐디 등 수요 급감 직종

③ 재취업촉진, 고용안정을 위해 **직업훈련 규모를 확대**하고, **훈련기간중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용자 지원 강화**

- **관광업, 항공·해운업계 대상 직업훈련 대상인원 4만명 확대**(내일배움카드 38.5→42.5만명, 376억원)

- **직업훈련 참여중인 실업자 등 月200만원의 저리(금리 1.0%) 생계비 용자 지원대상을 0.1만명 확대**(0.7→0.8만명, 111억원)

- ④ 경영상 애로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
- 사업장에서 임금·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(9.6→12.6만명, 최대 2,100만원 지급, 1,127억원)
 -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채당금 지원 요건인 민사소송 비용 지원 확대(소송비용 +1.7만원, 변호사비용 +1.7만원, 41억원)
- ⑤ 코로나19 영향 지역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확대를 통해 지자체별 방역활동 및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

3. 경제활력 보강

1 내수 회복 지원 - 先내수침체 방지 및 後분위기 반전에 총력

① 한시적 조세 감면을 통한 소비유인 제고

- ①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% 한시 인하(3월~6월, 100만원限, 세수감 △4,700억원)
- ② 3~6월중 체크·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(15~40% → 30~80%)으로 대폭 한시 확대
- * 공제율 변화 : (신용카드) 15→30% (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) 30→60%
(전통시장·대중교통) 40→80%
- ※ (참고) 근로자가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·직불카드·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
- ③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'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

<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>

수입금액	100억원 이하	100~500억원	500억원 초과
현행	0.3%	0.2%	0.03%
개정	0.35%	0.25%	0.06%
증가폭	+0.05%p	+0.05%p	+0.03%p

- ④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(’20년말→’22년말)

② 5대 소비쿠폰 및 구매환급을 통한 소비 활력 제고

※ 시행시기는 **코로나19 진정 추이**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

① 일·가정 양립 추세에 맞추어 일자리·휴가·문화·관광·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**5가지 쿠폰제도 도입**

- **(일자리 쿠폰)**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%를 **상품권으로 수령**시 총보수의 20%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(추경으로 추진)

▶ 노인일자리사업(공익형) 참여자 보수의 30%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(단, 희망자에 한하여 지원) → **4개월 시행**

* 예)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 :

(현행 월27만원 지급 → (개선) 현금 18.9만원+상품권 14만원 = 32.9만원 지급

- **(휴가 쿠폰)** 국내 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지원* 하는 **‘한국형 체크바캉스’** 지원 확대(8→12만명)

* 근로자 20만원 + 기업 10만원 + 정부 10만원 = 총 40만원

※ 상반기중 **‘한국형 체크바캉스’** 사용자를 대상으로 **관광상품 할인 병행**

- **(문화 쿠폰)** 저소득층 대상 9만원 상당의 **통합문화이용권** 추가 공급(161→171만명)
- **(관광 쿠폰)**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·숙박 인증시 추천을 통해 **국민관광상품권**(10만원) 신규 지급(6만명)
- **(출산 쿠폰)** 임신부에게 월 4만원 상당 **친환경농산물을 구매** 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추가 제공(4.5→ 8.0만명)

②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 **10% 환급 시행** (2,000억원, 추경으로 추진)

*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3월중 마련·발표

③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

※ 시행시기는 **코로나19 진정 추이**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

① 대·중소 유통업체, 전통시장,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**“(가칭)대한민국 동행세일”** 상반기 개최

* 민간부문 참여 제고 등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

② 입장료, 여행비용 할인 등을 통한 국내 관광유인 제고

▪ 국립 문화·예술시설 입장료 등 50% 한시 감면 (3~6월)

* 국립중앙박물관(기획전시), 국립현대미술관 입장료, 국립자연휴양림(42개소)

▪ 관광수요 회복시기에 맞추어 KTX 할인행사 추진 (1개월)

* (소그룹할인) 가족, 친구, 연인이 함께 가격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
KTX 4인 9만9천원(강릉선은 5만원)에 할인 판매 신설

* (인터넷특가) KTX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%→50%까지 할인 확대

▪ 문화비 경감 유도를 위해 지역축제, 공연단체 지원 확대

* 지역축제 40개(34→74개, 47억원), 공연단체 대관료 800건(416→1,216건, 40억원) 추가 지원

④ 내수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부분의 역할 강화

①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내 전액 집행 추진 (‘20년 한시 시행)

② 공무원의 경우, 주2회 이상 외부식당 이용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점심시간 확대 (60→90분 등) 권고

③ 운영 형태와 자체실정을 고려 한시적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

- ▶ 정부청사 : 월 1~2회 → 주 1회
- ▶ 지자체 : (위탁 식당) 수탁업체 협의 후 주 1회 이상
(직영 식당) 주 2회 이상
- ▶ 공공기관 :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·운영을 위한 지침 전달

⑤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

①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 주택을 약 30% 확대 (12,000→15,500호, 3,325억원)

②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규모의 주택을 공급 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를 신설 (2,000호, 2,635억원)

▪ 자녀 수에 적합한 규모(방수·면적)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(호)당 지원 금액도 대폭 인상*

*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당 0.2억원 추가 지원(예: (3자녀) + 0.2억원, (4자녀) + 0.4억원)

①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3대분야 100조 투자 목표 신속 집행

① 투자어로 해소,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가속화

- 3조원 규모의 5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애로해소 등을 지원하고, 투자지원카라반 등을 통해 12조원 추가 발굴

① 경기 고양 체험형 콘텐츠파크* 조성(1.8조원 투자)

* 4.2만명 수용 가능한 최첨단 전문 공연시설, 체험형 콘텐츠파크·스튜디오 등

- ▶ 기업은 사업여건 변화에 맞추어 기존 테마파크 중심의 사업계획을 대규모 전용공연장 중심 체험형 콘텐츠파크로 변경 희망
→ 한류 트렌드 변화 등을 감안,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협의 지원

② 전남 여수 LNG(액화천연가스) 터미널* 건립(1.2조원 투자)

* 해외에서 수입한 LNG를 액체 상태로 저장 후 기화시켜 배관을 통해 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시설

- ▶ 기업이 전국 가스배관망 이용(가스 인입)을 신청하였으나 배관운영상 사용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여 공사계획 승인기준 미충족
→ 가스 배관망의 계통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계획 승인 적극 검토

- 1~4단계 2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*의 경우에도, 금년 착공예정인 총 7건**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·관리

* 1단계(2.3조원), 2단계(6조원), 3단계(7.8조원), 4단계(9.9조원)

** ①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(3.7조원), ②포항 영일만 공장(1.5조원), ③인천 복합쇼핑몰(1.3조원), ④여수 석유화학공장(1.2조원), ⑤서울 창동 K-pop 공연장(0.5조원), ⑥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(0.2조원), ⑦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(0.2조원)

② 금년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 집행·신규사업 발굴 신속 추진

- 금년 집행 예정인 민자사업 5.2조원의 경우, 상반기중 2.6조원(전년동기비 +1.2조원), 1/4분기중 1.3조원(전년동기비 +0.7조원) 집행 추진

< '19년 집행실적 및 '20년 집행목표(억원, %, 누적기준) >

	1/4분기		2/4분기		3/4분기		4/4분기	
	'19(실적)	'20(계획)	'19(실적)	'20(계획)	'19(실적)	'20(계획)	'19(실적)	'20(계획)
집행액 <집행률>	0.6 <15.0>	1.3 <25.0>	1.4 <33.4>	2.6 <50.0>	2.2 <54.5>	3.9 <75.0>	4.0 (96.6)	5.2 <100>

-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**신규 대형 민자사업** 신속 발굴 추진

* 주요사업 예시 : 기간교통망 사업(5조원), 완충저류시설 사업(2조원), 하수처리장 이전·현대화(1.5조원), 항만법에 따른 신항인프라, 항만재개발(0.9조원)

- ③ 금년 既계획된 **공공투자** 60조원중 1/4분기내 13.6조원(전년동기비 +4조원), **상반기내 28.9조원**(전년동기비 +5.0조원) 집행 추진

②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

- ① **SOC 및 생활SOC 사업**을 **상반기내 60% 이상 집행**하여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강화

< 現 재정집행 계획(단위 : 조원, %) >

	'19년(잠정)			'20년(잠정)				
	연간 계획	상반기 계획		연간 계획	1/4분기 계획		상반기 계획	
		금액	집행률		금액	집행률	금액	집행률
SOC	42.9	25.1	59.8	47.2	13.7	29.0	28.6	60.5
생활SOC	8.6	5.7	65.0	10.5	3.1	30.0	6.8	65.0

- ② 노후 주거지 및 쇠퇴한 구도심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**도시 재생사업 1.7조원**을 **상반기내 65%** 집중 투자(1.1조원)
- ③ **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**중 0.2조원(총사업비 기준)을 **상반기내** 착공하고, 연내 1.7조원(총사업비 기준) 규모 사업 최대한 당겨 착공
- ④ 상수원 수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**노후화된 지자체 환경 기초시설 정비** 지원 확대(134→225건)

③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및 규제혁파 가속화

- ① '20년 **정책금융** 공급계획 479조원 중 **상반기내 275조원** 공급
- **중소·중견 기업**에 대해서도 기존계획 대비 **상반기내 18.1조원** 추가 공급

* (1분기내) 당초계획: 69.0(24.2%) → 조기집행: 79.1(27.7%) <+10.1조원>
(상반기내) 당초계획: 146.3(51.3%) → 조기집행: 164.4(57.7%) <+18.1조원>

- **신규 설비투자** 및 **환경·안전투자** 촉진 등을 위한 **10조원 규모 정책금융**을 **상반기내 5.4조원** 집중 공급

< 정책금융 지원 계획(단위: 조원, %) >

	연간	상반기 집행액	(집행률)
정책금융 전체 지원규모	479	274.9	(57.4)
중소·중견기업 지원	285	164.4	(57.7)
주요 투자촉진 프로그램*	10.5	5.4	(51.2)

*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(4.5조원), 산업구조고도화 지원(3.0조원), 환경·안전투자 지원(1.5조원),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(1.0조원), 시설투자 특별온렌딩(0.5조원)

② 新비즈니스 모델, 新산업 확산을 뒷받침하는 **규제개선** 등 가속화

-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사업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「**한걸음 모델**」 구축 및 도입('20.3월)
- 금융혁신을 위한 「**핀테크 종합 규제혁신 방안**」 마련('20.6월)
- 디지털혁신 3대 범정부 TF*를 통해 「**데이터 경제활성화 계획**」 및 「**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**」 마련 추진(~'20.4월)

* ①데이터 경제 TF('19.12.27 출범), ②디지털 정부혁신 TF('19.12.16), ③디지털 미디어 산업 TF('19.12.27)

- **바이오산업 활성화** 및 **경쟁력 강화**를 위한 5대분야 10대 핵심 과제별 대책을 상반기내 시리즈로 속도감 있게 발표

- ▶ (3월)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,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마스터플랜
- ▶ (4월) 바이오산업 금융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
- ▶ (5월) 바이오산업 인프라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, 그린 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
- ▶ (6월) 바이오 미래기술 개발을 위한 R&D 혁신전략, 바이오 클러스터 효율화 전략 K-뷰티 혁신 종합전략,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

④ **무역금융 확대·신속 공급 및 시장 다변화 지원**

- ① 무역금융을 **3.1조원 확대**된 260.3조원까지 공급하고, 신속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**상반기에 156조원** 집중 공급
- ② 對中 수출 후 수입자의 대금 未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·중견기업에 **무역보험 신속보상** 등 자금애로 해소

* 보험금 80%까지 가지급, 보상기간 단축(2개월→1개월), 불가항력사실증명서 제출시 2주일 이내보상 등

③ 수출 마케팅 총력 지원 등을 통한 **시장다변화** 가속화

- 기업의 수출 중단방지, 수출 역량강화 등을 위한 「수출활력 촉진단 2020」 신규 가동
- 시기 조정(上→下), 지역 변경(中→新남방·EU 등) 등을 통해 **해외 전시회·무역사절단** 등 계획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
- 코로나19 피해 농산물 수출품목*을 중심으로 신남방·신북방 등 **시장다변화**를 위한 **긴급판촉** 지원(33억원)

* 인삼, 유자차, 조제분유, 생우유, 쌀가공식품 등

④ 코로나19에 따른 **피해 농수산업체** 융자 지원 확대

- 對중국 수출비중이 30%이상인 농식품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

* '20년 3,481억원 + 추가 200억원 (금리 2.5~3.0% → 2.0~2.5%(△0.5%p))

- 수산식품의 경우, 對중국 수출액이 10%이상 감소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업체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경영자금 지원

⑤ GVC 차질에 대응한 **국내기업의 유턴 본격화** 지원 확대

① 국내 사업장 증설 경우에도 사업장 신설과 동일하게 **세제 혜택** 제공

현 행	개 선
해외 사업장 청산·양도/축소·유지 후 국내 사업장 신설·창업 → 법인세 5년 / 3년 100% + 2년간 50% 감면	(추가) 국내 사업장 증설의 경우, 증설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※ 감면한도: 해외 사업장 축소 수준 고려

* 감면대상 소득과 비감면대상 소득은 구분경리 필요

② **항만 배후단지** 유턴기업 입주 허용 추진(항만법 시행령 개정, '20.上~)

③ 중소·중견 유턴기업에 대해 신속한 **화학안전 제도 이행**을 위한 밀착형 컨설팅 및 융자금 우선 지원

* (컨설팅) 장외영향평가서 작성·취급시설 기준 준수 컨설팅 53.5억원 지원 활용
 (융자금) 화학물질 취급시설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활용

4. 전방위적 정책역량 집중

1 정책공조 및 협력 강화

- ① 한국은행 **금융중개지원대출*** 한도 **5조원 확대**(25→30조원)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**

* 은행의 대출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

** 은행의 대출실적의 50%까지 지원하여 은행대출기준 10조원까지 지원

-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4조원을 지원하는 가운데, 피해가 큰 **대구·경북지역**에 지원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회복 뒷받침
- 기존 프로그램의 한도조정*을 통해 창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**지원한도도 1조원 확대**

* 한도가 미소진된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분을 활용

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개편 (조원)

프로그램	현재한도	개편한도	조정	금리
▶ 신성장·일자리지원	10.0	11.0	+1.0	0.5
▶ 무역금융지원	2.5	2.5	-	0.5
▶ 지방중소기업지원	5.9	5.9	-	0.75
▶ 중소기업대출안정화	6.5	5.5	△1.0	0.5~0.75
▶ 한도유보분	0.1	5.1	+5.0	0.75
합 계	25	30	+5.0	0.5~0.75

- ② 공공기관 투자를 기존 **계획대비 0.5조원 증액**한 60.5조원으로 **확대**(60→60.5조원)

* (철도시설공단) +0.4조원 (한국토지주택공사) +0.1조원

- ③ 지역신보 **재원확충**(출연료율 인상)을 통한 **소상공인·자영업자 보증공급 확대**(16.7→17.2조원, +0.5조원)

*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료율 인상(0.02→0.04%)을 통해 공급 확대 추진

- ④ **시중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.2조원*** 신규 공급

* 금리우대: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%p~1.5%p 우대된 낮은 금리로 대출

- 은행권은 최소 6개월이상 상황 안정시까지 **기존 여신*의 만기를 연장****하고, 일부 은행에서 시행중인 **이자납부 유예도 확산** 독려

* (예시)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직·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기업으로서 원리금 연체, 자본잠식, 현저히 낮은 신용등급보유 등 부실사실이 없는 기업

** 여타 제2금융권(저축은행, 보험 등)도 만기연장 협력 유도

2

재정의 역할 강화

① 예비비 투입,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등을 통해 추가 재정보강 추진

- ① 검역·진단·격리 등 방역소요,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전 등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 소요 발생시 예비비 최대한 신속 지원
- ②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정예산 및 이·전용도 적극 활용·지원
* 재중국 재외학교 방역물품지원, 신종감염병 대국민홍보, 중앙대책본부 운영비 등
- ③ 총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2.0조원 수준을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등에 투입
 - 기금변경 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고, 1/4분기부터 신속히 집행 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 집중점검

②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, 국회통과시 2개월내 75% 이상 집행

- ① ①중소기업·소상공인 회복 지원, ②방역체계 고도화, ③경기보강(내수 및 지역경제) 등을 중심으로 추경(안) 편성 추진
 - 세입 경정과 함께 세출은 메르스 당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편성 추진
 - * 추가경정예산(안) 중점 투자방향(안)
①감염병 검역·진단·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, ②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회복 지원, ③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·고용안정 지원, ④비상 지역경제 지원
- ② 추경의 3월중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하고, 추경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후 2개월내 75% 이상 집행 추진
- ③ 코로나19 조기극복, 경제파급 효과 최소화 등을 위해 시·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·지방교육청 추경 편성 적극 독려

③ 상반기내 재정 3대분야 조기집행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

- ❶ (중앙) 확장적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
역대 최고 수준인 62%, 1/4분기중 32% 이상 조기집행 추진

* 관리대상규모(조원, <상반기 조기집행 목표>) : ('19) 291.9<61.0%> ('20) 305.5<62.0%>

-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중 66%, 1/4분기중 37% 이상 조기집행 추진

* 관리대상규모(조원, <상반기 조기집행 목표>) : ('19) 13.4<65.0%> ('20) 11.9<66.0%>

- ❷ (지방) 집행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발굴·해소하여 상반기중
60%, 1/4분기중 27% 이상 조기집행 추진

* 관리대상규모(조원, <상반기 조기집행 목표>) : ('19) 199.1<58.5%> ('20) 227.6<60.0%>

- ❸ (지방교육) 상반기중 63%, 1/4분기중 32% 이상 차질없이 집행될 수
있도록 집행 상황 등 밀착 관리

* 관리대상규모(조원, <상반기 조기집행 목표>) : ('19) 19.7<62.0%> ('20) 20.6<63.0%>

< 재정 3대분야 조기집행 계획 >

	'19년			'20년		
	연간계획	상반기 계획		연간계획	상반기 계획	
		금액	집행률		금액	집행률
합 계	510.7	306.3	-	553.7	338.9	-
중 앙 재 정	291.9	178.1	61.0	305.5	189.3	62.0
지 방 재 정	199.1	116.5	58.5	227.6	136.6	60.0
지방교육재정	19.7	12.2	62.0	20.6	13.0	63.0